

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(안)

목 차

- I. 글로벌 경제 및 건설산업의 **New Normal**
- 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**10대 이슈**
- III. **2기**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(안)
- IV. 선진화 추진기구와 방법
- V. 맺음말

2010. 4. 28.

이 상 호



GS 건설 경제연구소장

□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“New Normal”에 직면

- 이번 경제위기는 “주변부의 위기가 아닌 중심부의 위기” (Mohamed El-Erian, PIMCO)→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**New Normal**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실 대두

※ **New Normal**: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이 일상화되면서 향후 5~10년간 글로벌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

Old Normal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성장 | - '03~'07 연평균 4.7% 성장 |
| 레버리지 및 위험투자 확대 | - 글로벌 과잉유동성과 IB 등 금융권의 공격적 투자확대 |
| 초과수요/공급부족 | - 수요견인형 고성장세 지속 |
| G7 주도 | - 미국·EU 등 선진국 주도 Globalization |
| Global Imbalance | - 무역적자국 vs. 무역흑자국 |
| 단일 기축통화 | -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|
| 시장기능 중시 | - 민간주도 성장, 규제완화 등 |

New Normal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저성장/고실업 | - 소비 및 투자수요 부진→ 저성장 (3~4%)→고실업 |
| De-leveraging/ 금융규제 강화 | - 미국 등 저축 증대/소비축소 - IB 위축 및 금융규제 강화 |
| 수요위축/공급과잉 | - 저성장/고실업 →수요위축 - 상당기간 재고조정 불가피 |
| G20 주도 | - 중국·인도 등 신흥국 위상 강화(Asia Momentum) |
| Global Rebalance | -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시정 |
| 복수 기축통화 | - 달러화 가치 하락 → 위안화 등 복수 기축통화체제 부상 |
| 정부역할 강화 | - 글로벌 경기부양 및 출구전략 공조와 시장규제/감독 강화 |

□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건설산업도 경제위기 이후 과거와 다른 **New Normal**에 직면

- 국내 건설시장 성장세 위축 및 수요위축/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필요
- 출구전략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사업 축소에 대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

Old Normal

건설시장 성장

- 글로벌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**4%** 상회('03-'08)
- 건축시장은 **2.9%**('03-'08)
- 지역별/부문별 성장세 지속

레버리지 확대/ 부동산 버블형성

- 과잉유동성 / 레버리지로 건설수요 확대 → 버블 형성

초과수요/공급부족

- 부동산 가격상승 → 수요 지속 → 공급 부족

High-End Market

- 초고층 / 고분양가 등 **Luxury Building /Apt.** 공급 확대

재정사업으로 건설경기 조절

- 민간건설경기 위축시 **SOC**재정투자 확대 등 지원

민간기업 주도

- 민간기업 주도로 국내외 건축 및 개발사업 활성화

New Normal

건설시장 정체

- 글로벌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**2.2%** 전망('08-'13)
- 건축시장은 **0.9%**('08-'13)

신흥시장 지속 성장

- 미국·EU·일본시장 위축·정체
- 중동·중국·인도·동남아·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세 지속

Deleveraging/ 부동산 재고조정

- 가계부채 축소, 위험 회피
- 부동산 가격하락 내지 정체 → 재고조정 장기화(-'13)

수요위축/공급과잉

- 저성장/고실업/**Deleveraging**
- **Time Lag**으로 인한 공급과잉

Low-End/ Local Market

- **High-End** 시장 위축
- **Low Cost Construction** 중요

재정사업 위축

- 재정건전성 확보 → 재정사업 축소 →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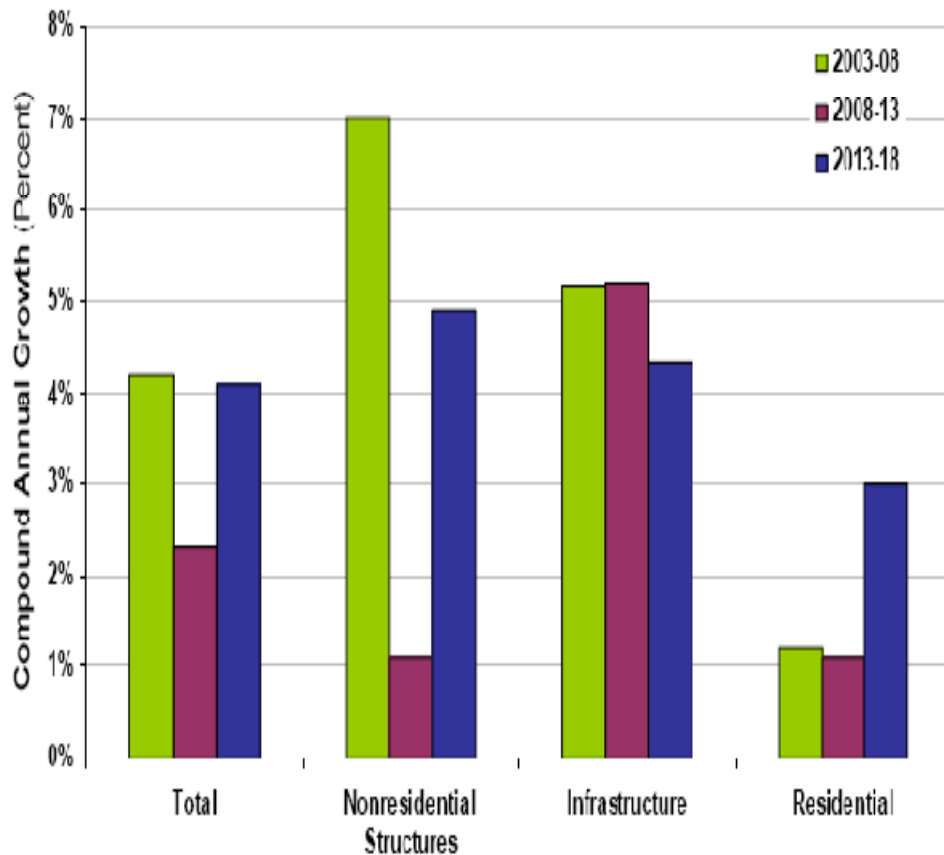
민-관 협력강화

- 녹색건설시장 개척/활성화
- **G20**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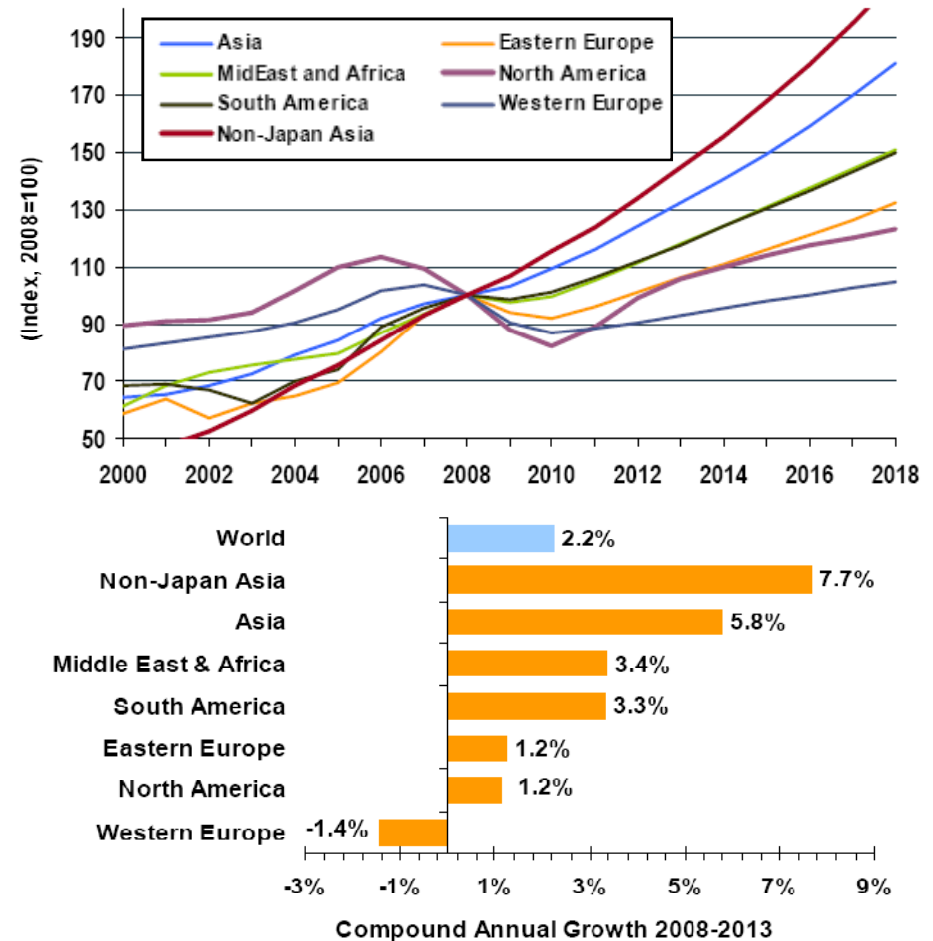
□ '03~'08년간 4%를 상회하던 글로벌 건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'08~'13년간 2%대로 하락 전망

- 건축시장은 상당기간('08~'13) 재고조정 예상, 인프라시장이 세계건설시장 성장 주도 전망
- 미국/EU/일본 등 선진국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(특히 중국·인도 등 아시아 시장)은 성장세 지속 전망

세계 건설시장 부문별 성장률 전망



지역별 세계건설시장 성장추이와 전망



자료: Global Insight(2009)

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10대 이슈

2.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, 실업률 회복 지연

□ 재정투자 확대, 저금리,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'09년 0.2%성장('10년 5.2% 성장 전망, 한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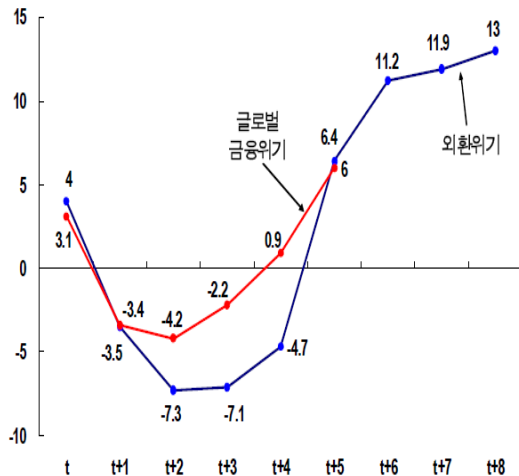
- 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하락 폭이 작았고, 조기 회복 → 미국/EU/중국 등 대외 불안 요인 여전
- 실업률 추이(통계청, '10.4): 3.5%('09.12) → 5.0%('10.1) → 4.9%('10.2) → 4.1%('10.3)

국내 주요 기관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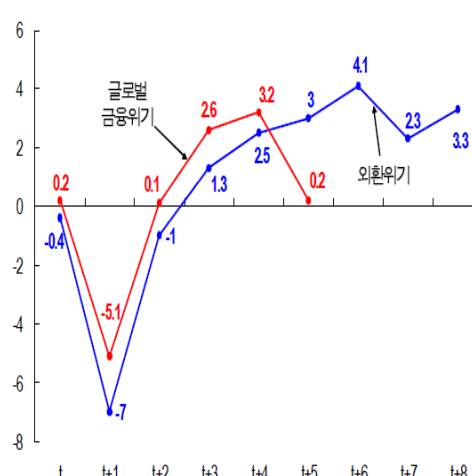
| 정부/공공기관 | | | 민간기관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획재정부 ('09.12) | 한국은행 ('10.4) | 한국개발연구원 ('09.11) | 삼성경제연구소 ('10.3) | LG경제연구원 ('09.12) | 한국경제연구원 ('09.12) |
| 5.0% | 5.2% | 5.5% | 4.3% | 4.6% | 4.2% |

경제회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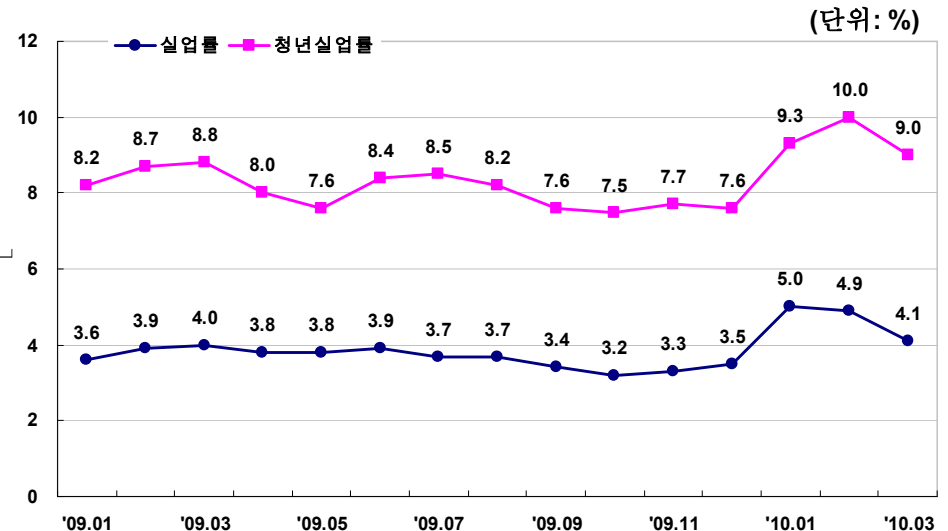
< 전년 동기 대비 >



< 전기 대비 >



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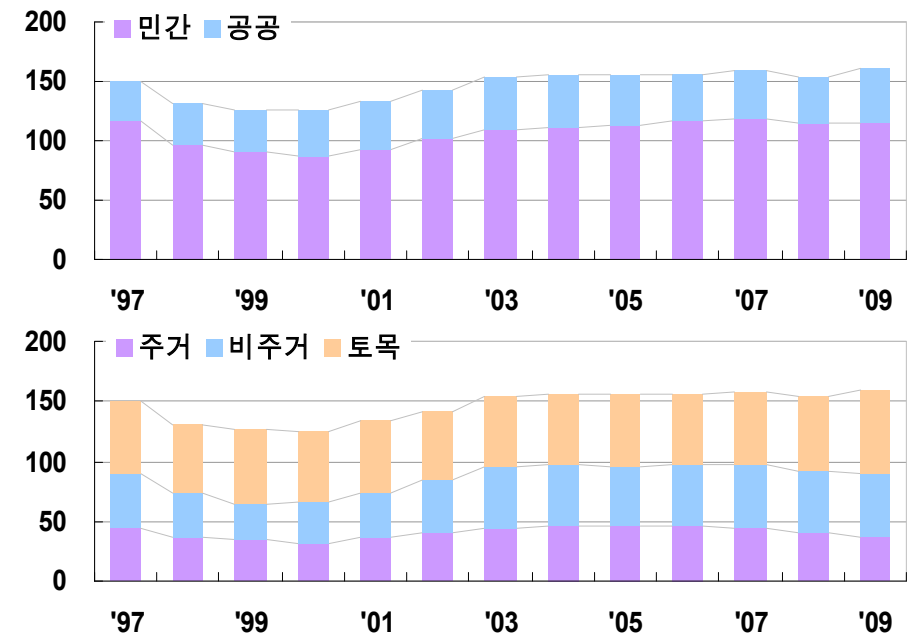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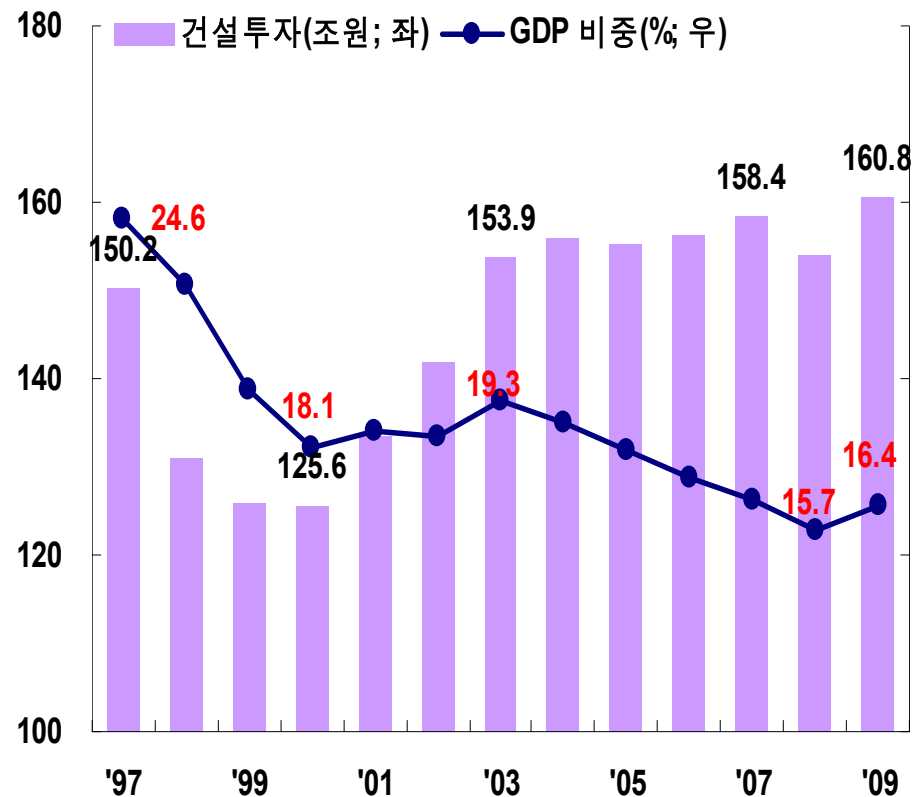
*t는 위기발생 시점으로 외환위기는 ' 97년 4/4분기, 글로벌 금융위기는 ' 08년 3/4분기임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(2010.3)

□ 건설투자는 '03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 후 155조원 내외 규모 유지 → 향후 160조원대 정체 전망

- GDP 대비 비중 지속 감소: '90년대 25% 수준 → 16% 수준 대폭 감소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('08-'09년) 공공/토목 부문 확대 vs. 민간/주거 부문 축소

국내 건설투자 추이

(단위: 조원)



- 민간 115조원 내외 / 공공 40조원 내외 규모 유지 (외환위기 및 회복기('98-'02년) 제외)
- 토목 60조원 내외 규모 유지 → '09년 70조원 돌파
- 주거 부문 '00년대 중반 45조원 내외 → '09년 38조원 축소

주: 2005년 불변가격

자료: 한국은행 ECOS DB

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10대 이슈

4. 정부재정사업 및 SOC투자비중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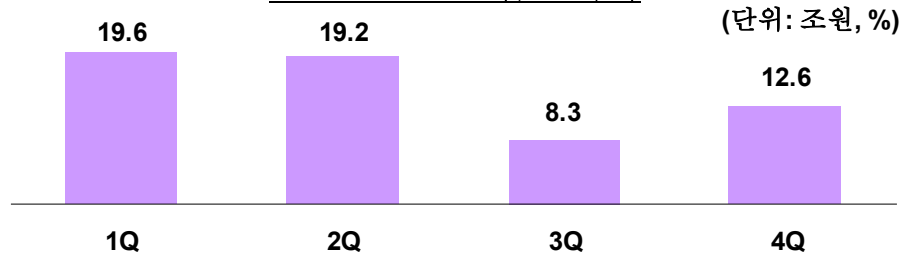
□ 정부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**4.2%** 이지만, **SOC투자** 증가율은 **2.0%**로 계획('09-'13)

- **SOC 예산이 총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**

□ **2012년 내지 2013년까지는 건설투자 정체 전망 (큰 폭의 하락은 없다는 의미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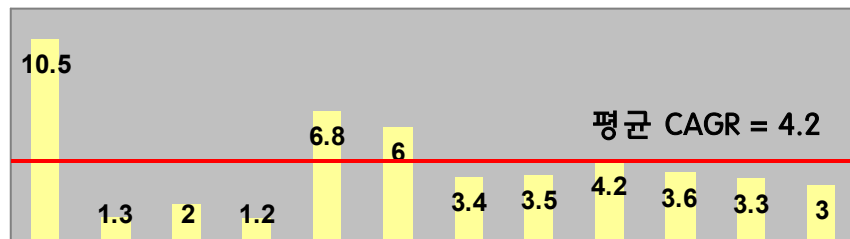
- **4대강 사업, 30대 선도 프로젝트, 2기 신도시, 혁신도시, 보금자리주택공급 등 지속**

2010년 SOC 집행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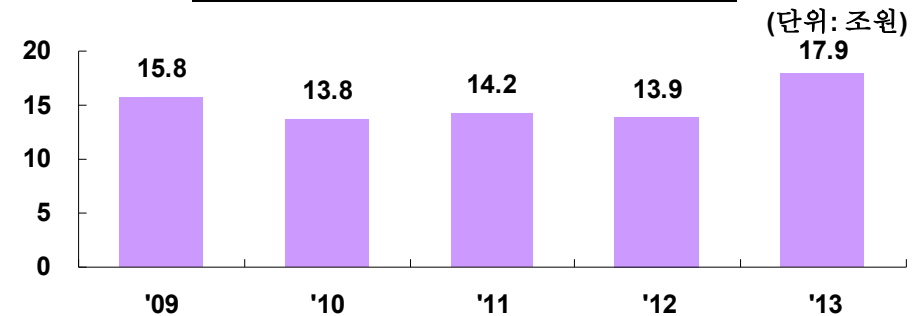
중기재정계획

| 구분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재정지출 | 284.5 | 291.8 | 306.6 | 322.0 | 335.3 |
| SOC | 24.7 | 24.8 | 25.3 | 25.9 | 26.7 |
| 비중 | 8.7 | 8.5 | 8.3 | 8.0 | 8.0 |



R&D 산업 **SOC** 농수산 보건 교육 문화 환경 국방 통일 공공 행정

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재정소요



주요 국책사업 투자계획

| 구분 | 합계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녹색뉴딜 (민자) | 33.3 (7.0) | 3.4 (1.3) | 9.8 (2.1) | 11.9 (2.1) | 8.3 (1.5) | - |
| 30대 선도프로젝트 | 50 | 3.6 | 3.4 | 미확정 | | |
| 세종시 (민자) | 22.5 (4.5) | 4조원 기 집행 / 수정안 26조원 | | | | |
| 보금자리주택 | 29 (60만) | 6.2 (13만) | 8.8 (18만) | 약 14조원 (29만호) | | |

*녹색뉴딜: 4대강 사업 15.4조원 포함

- 2기 신도시 공급계획(약 57.5만호)과 '09년부터 150만호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 추진 중
- '09~'12년간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서만 32만호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(연간 8만호)
 - 공공주택 공급비중 확대(민간주택시장 위축): '00년 14.0만호(32.4%) → '10년 18.5만호(46.1%)

2기 신도시 분양실적 /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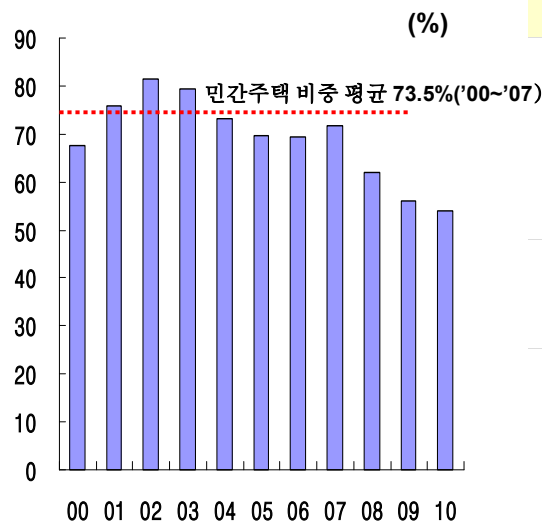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합계 | '08년 이전 | '09 | '10 | '11 | '12 | '13년 이후 |
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분양(천호) | 575 | 77 | 39 | 82 | 125 | 115 | 184 |

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추이

| 구분 | (만호, %)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전체 | 공공 | 민간 | |
| 2000 | 43.3 | 14.0 (32.4) | 29.3 (67.6) | |
| 2001 | 53.0 | 12.8 (24.1) | 40.2 (75.9) | |
| 2002 | 66.7 | 12.4 (18.6) | 54.3 (81.4) | |
| 2003 | 58.5 | 12.1 (20.6) | 46.5 (79.4) | |
| 2004 | 46.4 | 12.4 (26.7) | 34.0 (73.3) | |
| 2005 | 46.4 | 14.1 (30.4) | 32.3 (69.6) | |
| 2006 | 47.0 | 14.4 (30.6) | 32.6 (69.4) | |
| 2007 | 55.6 | 15.7 (28.2) | 39.9 (71.8) | |
| 2008 | 37.1 | 14.1 (38.0) | 23.0 (62.0) | |
| 2009 | 38.2 | 16.8 (44.0) | 21.4 (56.0) | |
| 2010 (목표) | 40.1 | 18.5 (46.1) | 21.6 (53.9) | |

주: () 내는 전체에 대한 비중

자료: 국토해양부, 한국은행(2010.4)



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

| 지역 | 택지유형별 공급방안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도권 (100만호) | • 도심 20만호(재건축, 재개발, 역세권 등) |
| | • 도시근교 30만호(개발제한구역 해제 등) |
| 지방 (50만호) | *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|
| | • 도시외곽 50만호(신도시 등 택지개발) |
| | • 택지개발 50만호 |

수도권 GB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 / 확대 공급

- 당초: '09~'18년 30만호 공급(연간 3만호)

- 변경: '09~'12년 32만호 공급(연간 8만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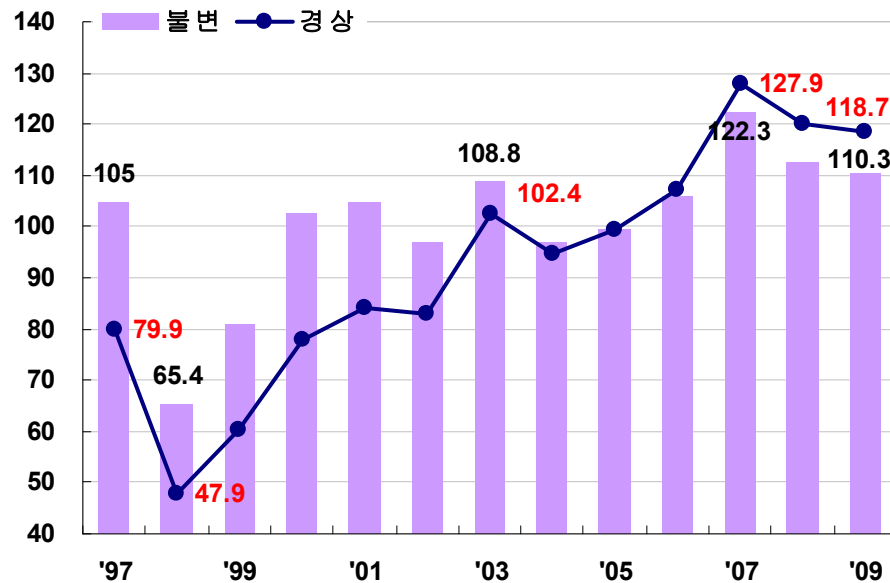
* 민간 분양 10만호 별도

□ 국내 건설수주는 '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, 경기부양 정책으로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

- 공공 주거 확대 추세 / 공공 토목 '09년 급증
- 민간 주거 '07년 정점 후 급감 / 기타 부문 상대적으로 안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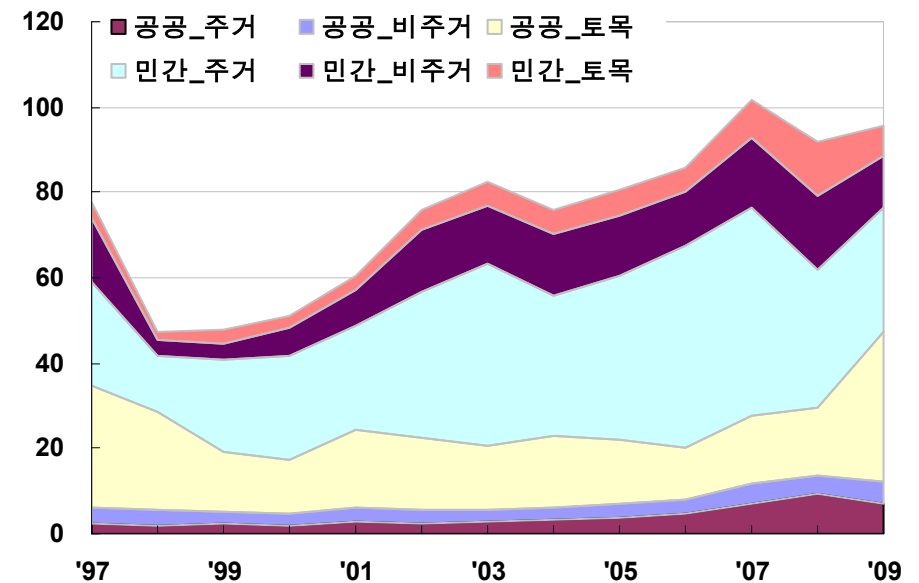
국내 건설수주 추이

(단위: 조원)



주: 2005년 불변가적

- 건설수주 '07년 128조원 기록 후 감소
- 외환위기 대비 감소 폭 상대적 완만
- *정부의 선제적 경기부양책 효과



- 공공 주거 확대 / 공공 토목 '09년 급증
- 민간 주거 '07년 정점 후 급감
- 민간 비주거/토목 부문 일정 규모 지속

□ '09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91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

- 중동(72.7%) 및 플랜트(72.6%) 수주편중 심화 vs. 토목(11.7%), 건축(12.8%) 수주 비중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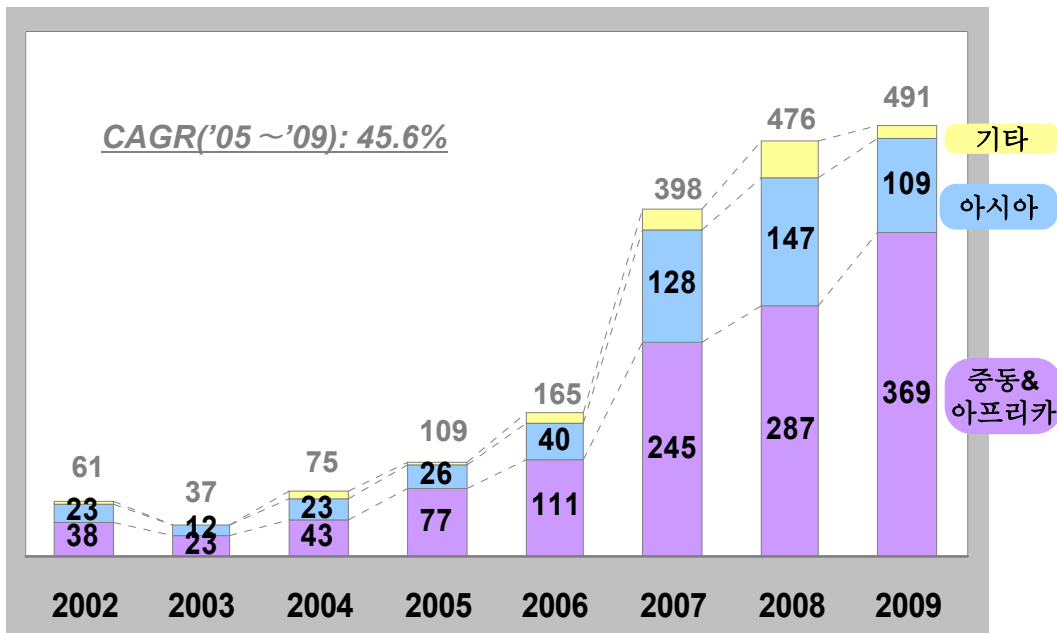
□ '10년 해외건설 수주전망은 740억불(해외건설협회 집계)

- '10.4.21 현재 UAE 원전 수주 등을 포함 313억불 수주
- 국내 건설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제회복 가시화로 우리 정부 및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노력 강화
-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중동 및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

지역별/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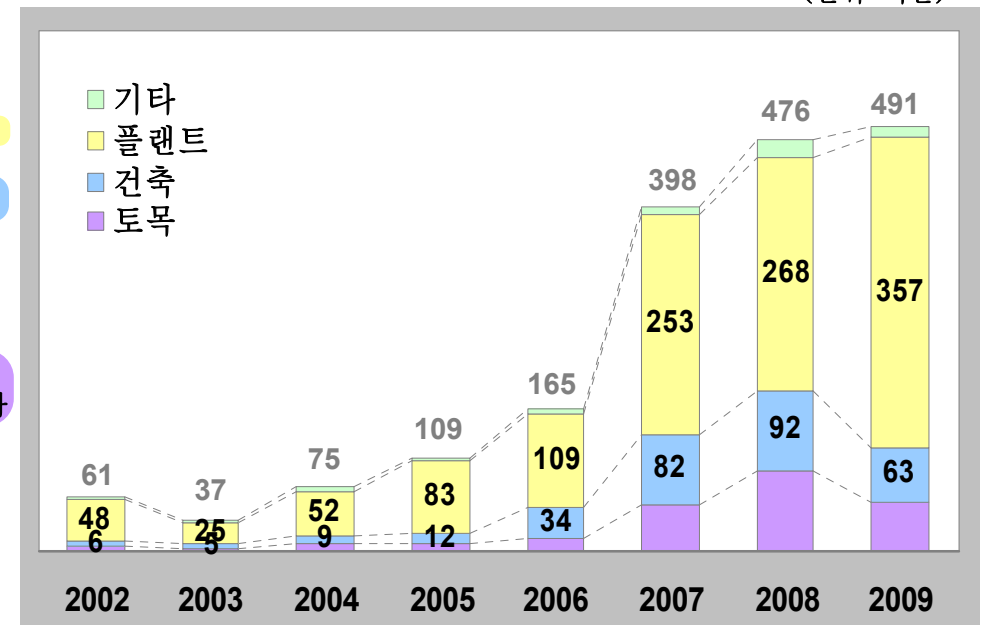
해외수주(지역별)*

(단위: 억불)



해외수주(공종별)*

(단위: 억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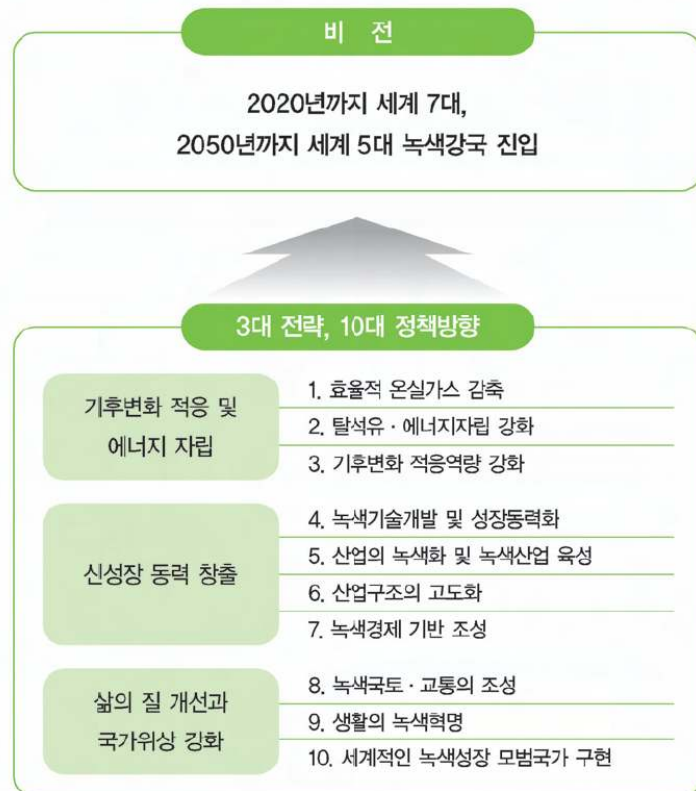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해외건설협회

□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본격화와 녹색건설시장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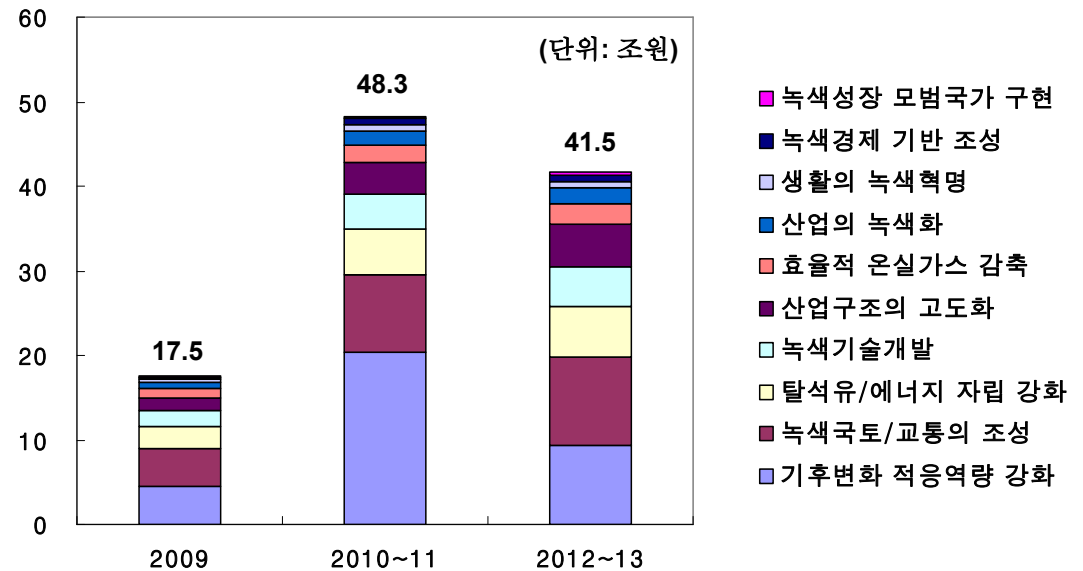
- '09~'13년간 총 107조원 투자계획(매년 GDP의 약 2% 수준)
- '10년 이후 그린홈/빌딩/시티 및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녹색건설시장 성장 본격화 전망

녹색성장 국가전략 개요



- 저탄소 녹색성장 최상위 국가계획
- '09~'13년 연도별 실행방안 제시

연도별 재정투자계획('09~'13)



- '09~'13년간 총 107조원 투자계획
- 매년 GDP의 약 2% 수준
- 기후변화 적응, 녹색국토/교통 조성, 탈석유/에너지 자립 등 3대 과제가 총 투자비의 66% 차지 (4대강, 저탄소 교통망, 그린홈, 원자력 발전 중심 전개)

□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

- 분양공사의 매출액 인식기준, 자체사업과 지주공동사업 구분 등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도입방안 논의 필요
- IFRS가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건설업체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건설제도 개편 검토

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 로드맵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|
| ①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|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,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 적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- 선택적용(2009년): 희망기업(금융회사 제외) - 의무적용(2011년): 모든 상장기업 | | |
| ② 분·반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기 | | 적용시기 | 분·반기 연결재무제표 |
| | 1단계 | 2009년 |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|
| | 2단계 | 2011년 | 자산2조원 이상 |
| | 3단계 | 2013년 | 모든 상장기업 |
| ③ 연결범위 |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| | |
| ④ 비재무적 사항 연결공시 | 사업보고서 등의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-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합병·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해 공시 | | |
| ⑤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 운용 |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 (2011년부터 적용) | | |
| ⑥ K-IFRS 제정 | 2007년 하반기까지 제정업무 완료 | | |

자료: 금융감독원

IFRS 도입시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

| 분 류 | 현행 GAAP | IFRS 도입에 따른 신규회계처리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IFRS 적용기업 (상장기업) | 비적용기업 (비상장기업) |
| 1. 분양공사의 매출액 인식기준 | - 진행률 기준 | - 인도 기준 | - 진행률 기준 |
| 2. PF사업의 우발 부채 산정기준 | - 부채 전환 가능성이 8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 | - 부채 전환 가능성이 5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 | - 부채 전환 가능성이 80% 이상인 경우 부채로 계상 |
| 3. 임대주택의 회계처리 | - 금융리스로 계상되 건설사의 부채로 미계상 | - 리스자산(금융리스, 운용리스) 모두 부채로 계상 | - '10년 하반기 결정 예정 |
| | - 금융리스: 임차인(입주자)의 부채로 인식 | | |
| | - 운용리스: 임대인(건설사)의 부채로 인식 | | |
| 4. 재정사업 | - 진행률 기준 | - 진행률 기준 | - 진행률 기준 |
| 5. 법인세법의 처리방향 | - 현행 법인세법 적용 | - 결정된 바 없음 | - 현행 법인세법 적용 |

자료: 대한건설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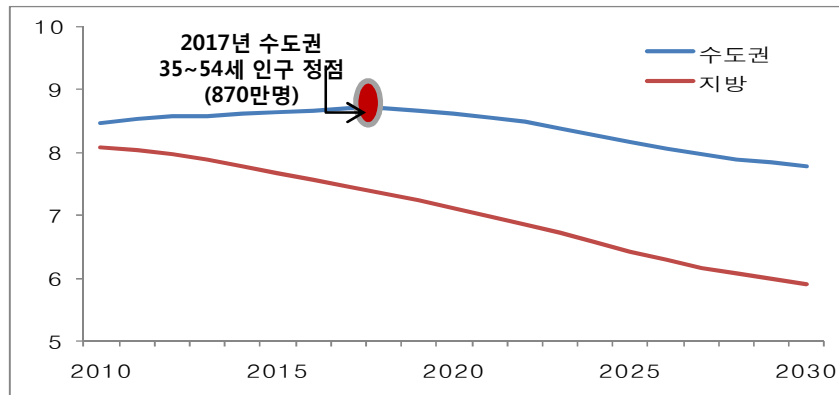
II.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주요 이슈

10.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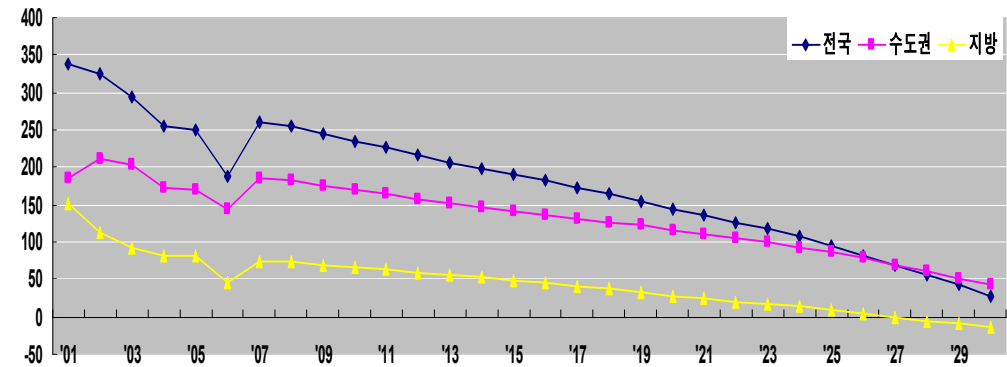
□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, 가구 증가율 둔화,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중장기 건설수요 위축 전망

- 주된 주택수요층인 핵심생산인력(35~54)은 2011년부터 감소(수도권은 2017년부터 감소)
-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중장기 건설 및 주택정책 수립과 건설업체의 대응전략 모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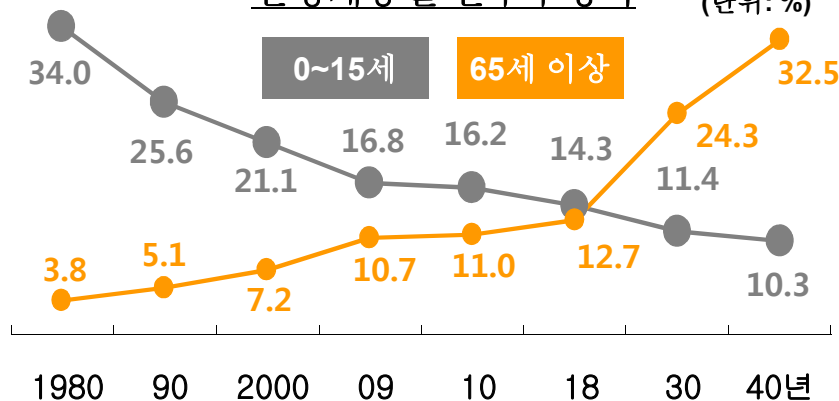
핵심생산인력(35~54세) 변화 전망 (단위: 백만명)



가구 증감 추이



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신한FSB연구소(2010.4)

총가구, 1인 가구수와 비중 (단위: 만가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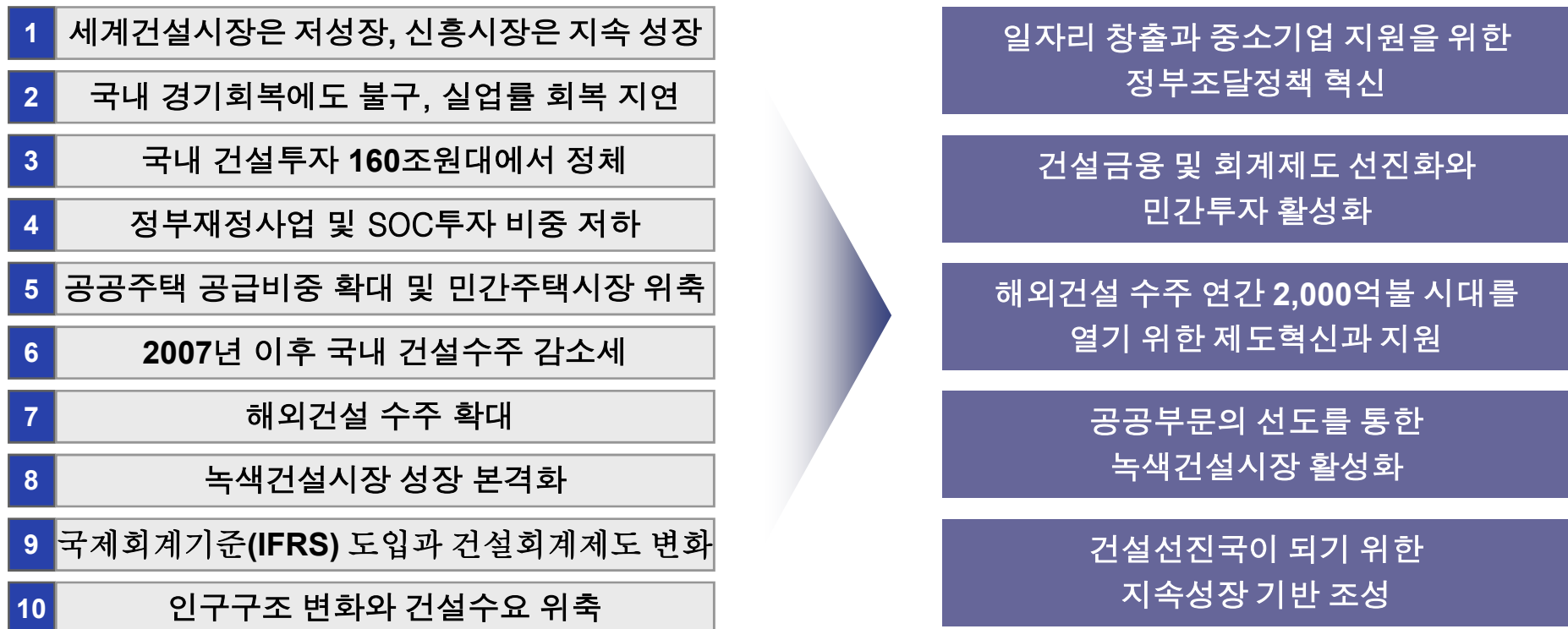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2000 | 2005 | 2010 | 2020 | 2030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총가구 (A) | 1,451 | 1,597 | 1,715 | 1,901 | 1,987 |
| 1인가구 (B) | 226 | 319 | 347 | 411 | 471 |
| 비중 (B/A) | 15.6 | 20.0 | 20.2 | 21.6 | 23.7 |

자료: 통계청, 장래가구추계.

주: 2000년과 2005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, 이후 가구수는 추계된 것임.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**New Normal**에 대비, 건설산업의 지속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과제발굴 필요
-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국제회계기준(**IFRS**) 도입 등에 따른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가 시급한 과제
 - 중장기적으로는 1기 선진화 방안의 3대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던 해외건설 수주 **2,000억불** 시대를 열고, 녹색건설 시장 활성화 및 건설선진국이 되기 위한 인력양성, 기술력 확보 등 지속성장 기반 구축 중요

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10대 이슈와 선진화 과제(안) 개관



□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정책 혁신방안 수립

-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대 곤란(향후 재정사업 축소 등 불가피)
→ 정부조달정책과 제도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및 기능인력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, 대·중소기업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건설기술인력제도 및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편

- 토목/건축학과를 졸업한 젊은 인력의 취업난
→ 건설기술인력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으로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확대
- 기술사제도, PQ제도 개편 등

가격경쟁에서 기술·품질경쟁으로 정책방향 전환

- 정부조달시장에서 가격경쟁 확대 추세 심화
→ 예산절감 외에 고용·품질·안전 등 다양한 정책목표의 종합적인 최적화 필요
- 정부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전환

중소규모 공사 및 용역발주제도 개선

-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심각 →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 강구
- 직접시공제도 적용 확대, 중소규모 공사 및 용역발주제도 개편 등

수평적 협력체계로 건설생산체계 개편

- 건설업 면허제도, 하도급제도 등에 기초한 수직적 생산체계는 비효율성과 불법·탈법 행위 유발 → 수평적 협력체계로 전환
-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검토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규제 및 투자은행(IB) 변화에 따른 건설금융 위상 정립 필요
 - '10년 하반기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 중요 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사실상 중단된 공모형 PF 사업 및 SOC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 강구
 -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른 건설회계의 선진화도 당면 현안과제

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에 따른 건설제도 선진화

- '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IFRS 적용 → 건설업 특성반영 및 관련 건설제도 개편
 - 건설업 특성 반영 여부 검토
 - 시공능력평가제도, PQ경영평가제도 등 개선 검토

공모형 PF제도 개선과 위상 정립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모형 PF사업 정체 내지 유찰사태 빈발 → “선택과 집중” 원칙 아래 공모형PF사업의 정상적 추진방안 마련
 -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

SOC민간투자제도 개선과 위상 정립

- '10년 상반기중 비상경제체제 종료시 재정사업 축소 → SOC민간투자 활성화 필요
 -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신 해소 중요
 - 한국 민간투자제도 수출 및 해외민자시장 진출 확대 노력 병행

부동산 PF제도 개선

-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부동산 PF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고조 → 시공사 지급보증을 전제로 하는 현행 부동산PF 사업구조 선진화
 - 사업 참여자간 합리적 리스크 배분 방안 등 검토

□ 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해외건설 수주 **2,000억불** 시대를 열기 위한 민-관 협력 중요

- 중동/플랜트시장 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신흥시장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-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, 인력 양성과 기술 및 금융역량 강화 추진
- 국내 건설 관련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국내경쟁력이 국제경쟁력이 될 수 있는 토대 구축

신흥시장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 토목/건축/개발시장 진출 확대 추진
 - 한국형 신도시 수출, (고속)철도시장 진출 등
 - 정부 건설외교 및 금융지원 강화 등

해외건설 인력, 기술 및 금융역량 강화

- 해외 플랜트 수주 급증으로 심각한 인력난, 소프트 경쟁력 취약, 파이낸싱 역량 부족 여전
→ 글로벌 건설인력 양성, 설계·엔지니어링 및 금융역량 강화 필요
 -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기 확충 등 추진

G20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

- 지식경제부 주도로 **G20(+30억 시장)** 진출확대 추진 → 건설업계도 적극 참여 필요
 - 타업종(무역업체 등)과의 협력 강화
 - 자원개발과 **SOC** 연계 등 신사업 발굴 확대

국내 건설 관련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

- 후진적인 국내 건설 법/제도/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추진
 - 설계·엔지니어링제도 선진화
 - 공공공사 발주 및 입낙찰제도 선진화
 - 건설보증·보험시장 선진화

□ 녹색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중요

- 주택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민간부문의 그린홈/빌딩/시티는 활성화 곤란
→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리모델링과 탄소제로 공공주택단지 건설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설시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필요

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빌딩시장 활성화

-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성 전수 조사 →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단계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
→ 리모델링 착수 및 민간으로 확대 추진
- 그린빌딩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
 - 탄소저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

U-Eco City 건설과 수출산업화

- 경제자유구역, 수도권 공모형 PF 사업지구, 도시정비 사업 등에서 **U-Eco City** 건설 확대
→ 신흥국 해외신도시 수출산업으로 육성

탄소제로 공공주택단지 건설/그린홈 시장 활성화

- 공공에서 주도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탄소제로 주택단지 조기 건설
 - 국가차원의 **Smart Grid** 구축과 연계한 **Micro Grid** 주택단지 건설 병행

세계최고수준의 녹색기술 및 금융역량 확보

- 녹색건설을 위한 설계·엔지니어링 역량 강화
- 녹색금융의 획기적 확충과 지원 강화
 -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녹색건설 투자 확대 유도

Ⅲ. 2기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(안)

6. 건설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속성장 기반 조성

- 건설재해율의 획기적 축소, 법질서 확립, 글로벌 인력양성과 전략적 **R&D** 등 지속성장 기반 구축
 - 인구구조 변화,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건설정책과 제도기반 구축

세계최고 수준의 건설재해율 축소와 안전 확보

- OECD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설재해/안전수준의 획기적 향상 추진
-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건설안전시스템 주기적인 점검 강화
 - 재난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정립 등

투명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부패척결

- 공공/민간을 가릴 것 없이 부정·부패가 심각한 산업이라는 이미지 확산 → 투명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없이는 선진화 기대 불가
-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과제 발굴 추진

세계적 수준의 건설인력 양성과 전략적 R&D

- 기술/기능인력 외에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등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의 역량 제고 추진
-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 **R&D** 추진 등

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설/공공주택정책 수립

- 고령화, 저출산,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주택정책 방향 정립

남북통일을 대비한 국토개발전략 수립

- 국토이용계획을 한반도 공간 재창조 계획으로 확대하여 북한을 포함한 「국토 100년 설계구상안」 개발방안 제시 등

IV. 선진화 추진기구와 방법

-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연구단 구성 → 금년말까지 선진화 방안 확정 → 정책반영 추진
 - 국토해양부, 기획재정부, 조달청,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 참여
- 향후 「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」 수립 및 민관합동기구로 「건설혁신센터」 설립 추진
 - 건설산업 선진화 작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강구

「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」 수립과 추진

- 현행 “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”과 “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”을 “건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”으로 통합
 - 『(가칭) 건설산업통합법』 제정시 법정계획으로 수립 의무화
-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,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범부처 차원의 계획으로 위상 정립(매 2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)
 - 계획수립 시점부터 관련 정부부처 참여
- 수립주체: 민관합동기구인 『건설혁신센터』

민관합동기구로 「건설혁신센터」 설립과 운영

- 향후 건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 설립 추진
 - 영국의 건설혁신기구인 **CE(Construction Excellence)** 등 벤치마킹
- 범정부·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기구로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
 - 제도혁신: 지속적인 제도개선 안 제시
 - 문화혁신: 기업문화 등 건설문화 혁신
 - 성과혁신: 성과측정과 평가시스템 운영
 - 혁신 Hub 역할: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

V. 맺음말

- 1기 선진화 작업과는 기본방향, 과제의 내용 및 추진주체 등 차이
 - 공공건설사업비 절감(1기) →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과제 발굴(2기)
- 지속성·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1기와 기본철학 및 방향성과 목표 등 공유
 - 1기 선진화 작업 참여자 다수 참여 및 연구단 구성 및 논의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지속 보강

1기 선진화 작업과의 차이점

- 기본방향
 - 1기: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→ 공공건설사업 효율화
 - 2기: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환경변화 대응
- 과제의 내용
 - 1기: 발주제도를 비롯, 후진적인 국내 건설 법/제도의 선진화
 - 2기: 해외건설수주 2,000억불시대 개막, 녹색건설시장 활성화, 글로벌 건설인력 양성 등 대외지향적, 미래지향적 과제 중심
- 추진주체
 - 1기: 국토부 지원/선진화위원회 주도
 - 2기: 기재부, 권익위 등 참여 폭 확대

1기 선진화 작업과 기본철학 및 방향성 등 공유

- 지속성·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1기와 기본철학 및 방향성 공유
 -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과 정착
 - 공공발주기관 혁신 우선 등
- 1기 선진화 방안과 목표공유
 - 해외건설 수주 연간 2,000억불 달성
 -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
- 1기 선진화 작업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민간전문가 다수 참여
 - 녹색건설 등 새로운 과제 추가 및 연구 충실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지속 보강